

일본의 정치적인 변화와 韓日관계*

진 창 수**

목 차

1. 한일관계의 모습
2. 역사문제의 돌출의 정치적인 배경
3.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과 일본 정치의 변화
4. 고이즈미 정권의 장래와 한일관계
5. 노무현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수상간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과 그에 따른 '행동계획의 발표이후 2년간의 한일관계는 전후 최고의 밀월 관계가 유지되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이전의 역사반성을 전제로 한 조건부적인 대일관계에서 실리우선적 대일외교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정부의 대일정책의 변화를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기면서 협조를 하고자 하면서 가능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오부치수상의 서거이후 모리수상의 '신의 국가' 발언에서부터 한일관계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하면서 고이즈미 내각의 출범이후 이전과 다르게 갈등과 긴장관계로 악화되었다. 이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가 부쇼사 출판사를 통해 제출된 역사 왜곡 교과서가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하였으며, 그후 고이즈미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수상으로서 공식참배한데서 비롯되었다. 게다가 이러한 역사인식문제와 더불어 쫄치 어업권 문제의 이익 갈등과 일본 정부의 유사입법추진으로 이어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우려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 정치의 구조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치의 구조적인 변화를 전제로 한 대일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03년 2월13일 세종연구소와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임.

**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1. 한일관계의 모습

현재 한일 관계의 모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양국정부내에서는 자국 이익 중심의 실리적인 시각이 커져가고 있는 점이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의 가해자로서 보상의 차원에서 한국을 배려하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특히 냉전시대하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반공연대의 측면에서 한국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5년 이후 무라야마 담화 이후 일본의 '반성과 사죄'에 대한 수상의 잇따른 발언과 '한일공동선언'으로 인한 한국의 실리외교로의 전환은 과거사문제에 대한 일단락을 짓는 측면이 비쳐지게 되었다. 안보분야에서도 탈냉전이 진행되면서 한일 관계는 한일 양국의 쌍무적인 관계가 더욱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미국을 통한 일본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점점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냉전 시기에는 한일 관계가 갈등할 경우 미국의 영향력을 동원하여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탈 냉전 이후 미국을 통한 압력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의 민주화와 일본의 파벌영수의 약화로 인한 한일간의 파이프라인의 약화되면서 한일 관계가 갈등할 경우 한일 정치권의 조정 능력은 줄어들게 되었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이전의 특수한 관계에서 여타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의 이국가간 관계로 전화되면서 한일정부간에는 자국 이익중시의 외교노선이 강화되어 양국간의 갈등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었다.

둘째 양국이 협조해야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점차적으로 많아지고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은 경제발전을 위해 일본의 투자와 기술협력이 중요해질 뿐만아니라, 일본 역시 일본 경제의 상대적인 하락과 중국 부상에 따른 한일경제관계의 협력이 요구되게 되었다. 또한 북한문제가 남북한 관계만이 아니라 동북아 지역문제로 대두되면서 특히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포이후 일본의 안보문제와 직결되면서 한일간의 안보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북한과 관련된 안보협력 뿐만아니라 9.18테러이후 양국은 테러에 대한 공조와 협조도 강조되게 되었다. 게다가 환경 등의 지구적인 차원의 문제는 협력을 요구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한일간의 협력 분야가 다원화되고 양자간의 협력이 다중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로 되었다.

셋째, 한일정부간의 교류보다 비정부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정부 중심의 교류가 활발하였지만 민간차원의 교류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현재에는 정부간의 교류보다는 민간부문의 교류와 협력이 오히려 앞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90년대 들어 비정부단체의 수가 급증하였고, 일본은 비정부단체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98년에는 NPO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군 위안부문제나 재일한국인 문제, 환경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양국간의 시민단체의 영대와 협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따라서 한일 관계는 특수한 관계에서 자국이익중심의 이국간의 관계로, 일차원적인 대립에서 탈피하여 다중화된 관계로, 그리고 정부중심에서 민간중심의 채널로 관계로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한편에서는 정부간에서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고, 한편에서는 양국의 번영을 위해 공동의 협력을 논의가 진행되는 한일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한일관계에 갈등을 가져오는 일본 국내정치적 구조적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역사문제의 돌출의 정치적인 배경

최근의 역사교과서문제와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참배가 한일간의 갈등의 최대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내 자국중심의 시각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1980년대의 일본사회는 국제화와 경제적인 호황 중에 있어 제2차세계대전의 가해자라는 인식에서 비교적 여유를 가지고 수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90년대에는 일본사회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 계기가 된 것이 위안부문제였다. 위안부문제는 인권이념과 여성지위의 급속한 향상이라는 국제적 조류 속에서 여성의 인권침해의 상징적사태로 되었으며 단기간에 세계적 관심을 끌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일본정부는 일본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자세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다.

이를 계기로 고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종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시인하면서부터 1995년 무라야마내각은 아시아여성기금(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을 설립하는 구체적 해결책을 내놓았다. 또한 무라야마 수상은 1995년 이른바 종전 50주년을 기념하여 과거 침략행위를 국가적인 잘못으로 인정하는 한편 식민지 통치에 대한 통절한 반성내용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죄 발언 중에서 가장 심화된 문건이었다.

이에 따라 무라야마내각 이후 하시모토수상, 오부치수상도 동아시아에 대해 발언의 수위는 다르지만 반복해서 사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또한 위안부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많은 역사교과서가 위안부문제를 기술하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강한 반발과 항의를 해온 우파들은 모임을 조직하여 정치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이다. 예를 들면 이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거나, '자유주의 사관연구회'의 결성, 그리고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으로 나타났다.

우파의 조직적인 반발이 국민으로 지지를 얻게 된 이유는 첫째 국제관계에서 볼 때 일 반국민들이 동아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것에 대한 회의와 불만이다. 일본은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해야 하나 라는 왜곡된 생각이었다.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일

본사회는 제2차세계대전의 가해자이며, 식민지 지배자로서 일본이라는 인식은 꽤 널리 퍼졌다. 또한 이에 대해 일본 국민이 나름대로 한국이나 중국에 반성과 사죄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대수상이 중국 한국에 사죄를 거듭하고 야스쿠니 참배를 절제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로부터 비난을 받자 적당히 해라 라는 반감이 형성되었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일본경제의 패배감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강한 일본을 재건해야 한다는 열망의 존재이다. 일본 경제는 90년대 초부터 버블경제의 붕괴와 더불어 금융기관의 도산, 기업의 생산성 악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고실업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장기불황은 좀처럼 회복의 조짐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정부에 강한 불만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90년대 들어 관료들의 부패와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관료제의 신화가 붕괴되면서 일본을 개혁할 새로운 정치의 리더십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열망과 희망은 한편에서는 건전한 일본의 자유화와 개혁을 유도하면서도 한편에서는 일본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우파가 주장하는 새로운 역사해석에 동조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본 국민은 우익의 논리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주장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순된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예를 들면 부쇼사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문제점을 비판하면서도 감정적으로 동조하는 측면이 나타난다.

역사문제가 돌출하게 된 것은 일본 사회의 우경화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 내부의 정부에 국내외적인 태도에 대한 불만과 우파의 논리가 결합되면서 나타난 90년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과 일본 정치의 변화

1)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 의미

앞에서 살펴본 일본 국민의 새로운 일본의 변혁과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국내적인 열망의 이중성이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에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특히 직접적으로는 자민당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데 무기력한 것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과는 먼 밀실과 담합의 파벌 정치 폐해에 대한 국민의 염증이 고이즈미정권의 탄생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따라서 총재후보였던 고이즈미씨는 국민의 열망을 자민당의 논리를 역으로 공격하면서 수상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 즉 파벌에 따른 인사를 배척하고, 당선 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하자는 파벌 비판을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파격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고이즈미씨의 파벌해소의 주장은 자민당의 기존 질서에서 본다면 수의 힘을 배경으로 간사장 등의 포스트를 차지하여온 반 하시모토파에 대한 공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수상의 등장은 지금까지 다케시타파(현재는 하시모토파)의 독주에 반대해온 YKK(야마사키, 가토, 고이즈미의 머리글자를 딴 그들간 연합을 지칭하는 말)연합이 지금까지 주류파인 하시모토파를 고립시키면서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리파(60명), 야마사키파(23명), 가토파(15명)에 에토·가메이파(55명)과 고노파(12명), 구 고모토파(13명)에 무파벌(23명)의 반하시모토파벌이 하시모토파(102명)과 호리우치파(43명)의 하시모토 연합 파벌에 대항하여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하였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은 자민당 기존 질서의 파괴와 변혁이 일본 경제 재건으로 나타나는 일본 국민들이 희망이었다. 고이즈미 정권은 경제 정책적으로는 보수 본류 노선과는 달리 신보수주의적인 경제정책을 기조에 깔고 있다. 특히 작은 정부와 구조개혁, 민영화, 재정삭감을 중시하는 신보수주의적인 취향은 일본체제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새로운 경제를 재건하고자 하는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서도 환영받을만한 건전한 흐름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은 일본의 개혁이라는 하나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이 얽혀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국민의 이중적인 정서와 결합된 포퓰리즘적인 현상이 기존의 수상과 차별적인 측면이다. 즉 고이즈미 수상의 특징적인 점은 일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국민적인 정서를 교묘히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나타났다는 점이다.

고이즈미수상이 취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일반적인 특징은 항상 대중 앞에 악인 적을 만들어 내고 그것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하여 끈임없이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고이즈미수상은 매스미디어에 교묘히 편승하면서 수구파 저항세력을 국민들에게 확인하면서 개혁을 권선징악의 구도로 몰고간다는 점이다. 고이즈미 수상이 말하는 수구파 저항세력(대표적으로 하시모토파)은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고이즈미수상의 인기 하락을 기다릴 뿐이다. 왜냐하면 고이즈미의 개혁자로서의 이미지는 수구파가 저항하면 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관망하는 것이 그들의 최선의 전략으로 간주되었다.

고이즈미수상의 포퓰리즘적 또 하나의 특징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매우 효과적이었다) 추상적인 개혁적이 표어를 반복하여 제창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개혁자로서의 이미지를 대중에 정착시키는 일이었다. 고이즈미 정권성립전후에서는 '구조개혁 없이는 경기회복없다'였으며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구조개혁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이라는 실질적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실체를 동반하고 있다는 착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었다.

고이즈미 개혁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지금까지 일본을 지탱해온 기존의 가치관(예를 들면 헌법 개정 불가)이 붕괴하면서 일본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내셔널리즘적 발상

이 국민적인 정서와 결합되면서 일본 정치의 중요부분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고이즈미 수상은 경제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군사 안보를 중심으로 한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 정치의 흐름에서 본다면 탈냉전이후 일본 경제에 걸맞는 군사력을 갖기를 원하면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주장하는 세력이 정치권에서 점점 확산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또한 1997년 경제위기 이후의 일본은 아시아 경제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미국 질서의 과도한 편입에서 찾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대안 모색이 일본적 내셔널리즘의 영향력 확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이즈미 수상의 이데올로기 지형은 기시(岸信介)·후쿠다(福田赳夫)로 이어지는 자민당 매 파 그룹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고이즈미 수상은 요시다 시게루를 중심으로 한 보수 본류 노선의 미일안보 중심 경제 우선 정책과는 약간의 차별 노선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안보정책에서는 미일안보 중심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성, 조기 헌법 개정 추구,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의 내셔널리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의 내셔널리즘적인 경향은 자민당 간사장과 정무회장의 인선에서도 잘 나타난다. 야마자키 타쿠(山崎 拓) 간사장은 자민당 국방족이면서 헌법 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적극적인 사상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아소 타로(麻生太郎) 정조회장은 총재선거과정에서 '일본 헌법은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 '교과서 검증은 문제없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관해 국가를 위해 생명을 던진 사람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는 강한 민족주의적인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 고이즈미 정권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파퓰리즘과 강한 내셔널리즘을 지닌 성향을 국민들이 지지하면서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고이즈미 수상의 등장으로 인해 일본정치는 경제회복을 위해 자민당 파벌 정치의 타파를 요구하는 국민적 바람과 탈냉전이후 일본의 정체성 확보라는 내셔널리즘적인 열망이 결합된 새로운 정치 흐름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현상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파장효과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고이즈미정권이 기존의 패쇄적인 자민당의 질서를 개혁하고 자유와 개방을 증가시키는 건전한 신보수주의적 개혁과 더불어 일본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우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셔널리즘적인 측면이 양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이즈미수상의 장래가 결국 일본 정치의 장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자민당 정치의 구조적인 변화

가) 파벌의 영향력 저하

선거제도개혁에 의해 도입된 소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 시대와 비교하여 국회의원의 역할을 크게 변화시켰다. 중선거구제하에서는 국회의원은 전문화된 정책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 선거에서 당선될 뿐만 아니라 자민당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 결과 중선거구제하에서는 자민당은 다양한 형태의 족의원이 형성되었으며, 이들간의 경쟁과 조정이 자민당을 장기집권의 길로 이끄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소선거구제하에서 개개 국회의원의 역할이 족의원으로 대표되는 전문성보다는 지역구의 모든 이익을 관장하거나 대표하는 광범위성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민당내에서도 이전과 달리 세 개까지의 자민당정조회의 부회회의 참가하는 제한을 철폐하면서 국회의원이 정조회의 어느 부회에도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의원 기능의 다각화는 특정 정책에 정통한 족의원이 되는 것을 어렵게 하는 한편 부회의 참가자가 불확정하게 되면서 정책내에 이익주장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족의원의 보스들이 행해온 이익조정이 이전에 비해 곤란하게 되었다.

또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은 장기불황과 더불어 정치자금의 파이프를 급속하게 축소시켰다. 특히 2000년부터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업 단체헌금이 금지되어진 것은 파벌로서의 정치자금모금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까지의 파벌이 하였던 소속의원에 대한 정치자금 제공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족의원의 정치자금을 배경으로 다수의 의원을 확보하였던 하시모토파는 정치자금에 의한 파벌지배가 어렵게 되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자금에 대한 파벌의 의존 현상이 약화되면서 파벌영수의 개별 의원에 대한 영향력은 약해지게 되었다. 또한 돈을 매개로한 족의원시스템에 의한 파벌지배의 구도도 근거로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정치자금규제의 강화나 확대연좌제의 적용의 강화는 일본정치에서 돈보다는 조직적인 힘이 표로 연결되는 현상이 중시하게 되었다. 표를 가진 농업관계단체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치자금의 제공을 영향력의 원천으로서 해온 의사회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저하한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것은 그대로 돈과의 연결에 중점을 두어온 하시모토파의 영향력의 저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조직이 이전처럼 운용되는 것도 아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의 경향으로 인하여 개인중심의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조직이나 단체의 영향력이 저하되었다. 무당파층이 증가하고, 조직의 구속력은 이전에 비하여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조직이 지지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것은 창가학회의 공명당의 지지를 제외한다면 이제는 소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나) 세대교체

자민당 전체의 당선회수별 구성을 보면 당선회수3회이하의 젊은층이 점하는 비율은 45%이다. 이들 젊은층은 일반적으로 개혁지향이 강하며 파벌에 대한 충성심은 낮다. 어쨌든 파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력으로 당선을 해온 2세 의원은 이 경향이 현저하다. 그 때문에 젊은 의원의 많음은 파벌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하시모토파의 경우에도 총재 선거에서 하시모토 옹립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젊은 층이라면 파벌의 집회에서 우정민영화찬성론을 제기한 것도 젊은층이었다. 젊은층이 많아진다는 것은 파벌의 결속을 느슨하게 하였으며 간부의 영향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외교정책에서 세대교체라는 의미는 국제관계에서 합리주의적인 원칙과 국내중심의 이익 추구가 강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북한에 대한 태도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97년 방조단 이래 자민당은 북한측에 행방불명자의 조사를 의뢰하면서 한편에서는 식량을 원조하는 온건정책을 유지하였다. 이에 비해 요네다로 대표하는 젊은 세대들은 “북한에 쌀을 보내어도 납치사건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않는다. 강경자제로 나간다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로 반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중관계에서도 일중 우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기존의 노선과는 달리 중국을 견제해야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대만과의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세대의 등장은 내외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유사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며, 헌법개정까지 용인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전의 나카소네와 같은 전통적인 우파와 같은 경향을 지니고 있지만은 않다. 이러한 자위대의 확장이 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간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역사문제에 있어서는 내정간섭이라고 불쾌하게 생각하며 국내중심의 이익에 우선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다) 조정정치와 쇄락

일본 보수정치의 역사를 보면 자민당이 위기에 처할 때 상당한 조정력을 지니면서 정치를 좌우하는 유력 정치가들이 존재하였다. 지금까지 소파벌의 영수 몇 명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파벌의 장이면서 부총재가 되어 조정역을 하였던 것이다. 오오노 반작, 가와시마, 수이나 등을 말할 수 있다. 이들 유력정치가들은 스스로 총재직에 오르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오부치가 부총재에서 총재로 되면서부터 이러한 역할을 할 인물이 없어지게 되었다. 또한 조정역 = 부총재라는 직위도 없어지게 되었다. 생애 조정역으로 불리우는 타게시타가 사망함으로써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

물이 없어지게 되었다. 조정역의 부재의 상황이 존재함에 따라 일본의 정치가들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게 되면서 이익의 충돌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고이즈미 수상이었다.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 3역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민당내의 조정이라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물론 고이즈미는 조정역을 담당할 측근을 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역을 만들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스타일의 정치가는 종래의 수상에게는 보이지 않는 태도이다. 이것이 고이즈미의 강점이기도 하면서 약점이기도 하다. 고이즈미의 강점은 조정역이 부재하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하는데 있다. 따라서 주위의 사전 컨트롤이 듣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기존의 자민당 정치가의 규칙을 따르지 않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대해 기존의 규칙에 익숙해 있던 자민당내의 보수정치가 특히 하시모토파는 당황할 수 밖에 없다. 하시모토파는 여러 가지의 조정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민당을 지배하고자 하였다. 이에 비해 고이즈미 수상은 기존의 정치 규칙을 부정하는 것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됨으로서 고이즈미 수상은 자민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게 되었다. 한편 고이즈미 수상의 약점은 개혁에 대한 기대를 받으면서 실제로 그것을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저항세력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곳에 정치적인 힘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고이즈미는 여러곳에 개혁의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한곳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

어떻게 하든지 고이즈미수상의 정치는 자민당의 보수 정치와는 다를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는 이후의 정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고이즈미 이후의 자민당은 변하지 않을 수 없다. 자민당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내의 정치적인 규칙을 변화시켜 재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4. 고이즈미 정권의 장래와 한일관계

고이즈미 수상은 국민의 앞에서 살피본 이중적인 열망에서 탄생하였지만, 고이즈미 정권의 지속 여부는 구조개혁에 따른 경기의 동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이즈미 수상의 딜레마는 구조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기업의 도산, 실업자의 범람, 그리고 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고이즈미 수상의 정치적 지지는 약화되면서 정권에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 고이즈미 수상이 자민당내의 저항으로 인하여 개혁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이즈미 수상이 선택할 카드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일 것이다. 이것은 고이즈미수상이 '예산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산한다' 고 되풀이 하여 말한 것에서

도 알 수 있다. 개혁파와 저항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어 여론을 배경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려는 시나리오다. 또한 중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자민당을 깨고 민주당과 함께 새로운 정당을 형성하는 것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2001년 총재선거에서 패하였을 경우 민주당과 함께 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는 이전부터 고이즈미수상의 구상속에 있었다. 총재가 되어 실현화되지는 못하였지만, 자민당내의 저항세력과 대결할 경우에는 당연히 민주당과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시나리오도 고이즈미 수상의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선택지도 경기의 동향에 따라 고이즈미 수상에게 유리하게 되거나 불리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결국 고이즈미 수상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은 자민당내의 하시모토 파벌이나 가메이 파벌등으로 대표되는 저항세력이 아니라 경기의 동향과 관련된다. 우선 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저항세력의 발언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자민당내의 하시모토 파벌과 에도 가메이 파벌은 고이즈미 정권의 유지에는 동의하면서도 고이즈미의 개혁이 자신들의 기득 이익을 붕괴시키는 것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현재의 경기의 악화는 고이즈미 수상의 정책 실패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이즈미 정권의 개혁에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경기가 급속히 악화된다면 저항세력의 반론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서 고이즈미 수상의 개혁은 좌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연립여당으로서 자민당을 지지하고 있는 공명당은 개혁의 실패를 이유로 고이즈미 정권의 지지를 철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재정개혁(국채 30조엔 이하)과 특수법인의 민영화 문제 등도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면 수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경기가 원인이 되어 수상에서 물러간 예로서는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대패한 하시모토수상을 들 수 있다. 하시모토수상은 6대 개혁을 주장하여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았으나, 소비세 증세와 경기의 감퇴로 인하여 국민의 지지를 잃어버리게 되었다. 고이즈미수상도 하시모토수상의 경우와 같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고이즈미수상이 유리한 점은 중참의원 선거가 2004년에 있어 개혁을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고이즈미수상은 개혁으로부터 오는 국민의 고통을 주장하면서 선거에서 승리한 점이다. 따라서 경기가 급속히 악화되지 않는 한 고이즈미정권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이후의 후계자가 떠오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자민당내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어면서 당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대파벌인 하시모토파벌은 개혁의 저항세력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었으며 지도력을 발휘하기 힘들어 졌으며, 이전과 같은 밀실 담합에 의해 수상을 선출하기 힘든 상황이어서 고이즈미를 대신할 인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결과 약간의 경기변동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고이즈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는 계속될 것이며, 이경우에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과 보수당도 자민당과의 연립

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앞으로 고이즈미정권은 경기의 급격히 하락하지 않는 한 현재와 같은 저항세력과 야당과의 미묘한 균형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고이즈미 정권은 2004년 중참의원 더블 선거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정권의 지속은 앞에서 살펴본 일본 정치의 변화와 더불어 이전보다 보통의 양국관계(기존의 역사적인 관계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 일본의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관계)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고이즈미 정권은 미국중심의 외교정책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외교에 대한 배려가 적어 한국과의 외교에서도 일본 국내 정치상황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아 한일관계에서 이전과 달리 일본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고이즈미 수상 자신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용인의 발언, 헌법 개헌의 추진하겠다는 발언, 야스쿠니 신사의 공식 참배 등으로 나타나는 내셔널리즘적인 색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확대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일본 정국에서는 금기시되지 않는 상황하에서 고이즈미 정권은 이를 더욱더 현실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관계는 격랑의 파도에 휩싸일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관계의 협력관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

또한 북일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이라는 변수가 추가되어 한반도 안정을 위한 방정식이 복잡하게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가 점차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려고 함에 따라 동북아 힘의 향방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는 미일 동맹체제를 견고히 하면서 한반도 긴장완화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한국이 일본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다. 다만 한국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과 일본의 국내외적 필요성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아갈 것인가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5. 노무현 정부의 대일정책 방향

김대중 정부의 대일 정책의 성과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가져오는 인식전환과 교류활성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전과 달리 역사문제를 한일관계의 카드로 활용하지 않으면서 일본과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간으로 한정되었던 교류도 시민과 NGO간의 교류로 활성화됨으로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문제의 돌출이 결국 한일관계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김대중 정부의 한일공동선언 의미는 퇴색하고, 한일관계는 경색되게 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과제는 양국간의 관계에서 역사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한국의 국익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일본과 협력을 유지하여 갈 수 있는가에 있다. 물론 역사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한일간의 갈등을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한일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앞으로 한일관계는 순수한 양국간의 관계에서 점차 국제질서가 한일양국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일협력의 문제는 양국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데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일본을 기본적인 한국과의 협력 파트너라는 인식을 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이를 추구하는 한국으로서는 공동의 이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은 미국과 더불어 경제협력, 한반도 통일과정과 그 이후에 있어서도 한국의 전략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동북아에서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축으로 하고 한반도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갖는 주변 강대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이다.

더불어 21세기의 한일 양국은 과거사 문제가 우선되어 갈등하는 관계와 일본과의 협력을 백안시하는 태도로부터 탈피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익의 관점에서 20세기에는 금기시 되었던 안보협력 면에서도 보다 열린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이며, 한층 가속화되는 경제적 개방에 힘입어 한일 공동 시장 창설, 마약 등 범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등 양국간의 협력과 협조를 더욱 더 심화시켜 국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한일관계가 이전과 달리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형태의 문제제기와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고이즈미수상의 등장 이후 일본에서는 자민당시대와는 달리 한일관계를 특수한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생각하는 흐름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일본 정치의 변화는 한일관계에 더한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역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정책 틀을 벗어나, 한일간의 새로운 협력과 타협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일정책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본과의 협력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은 한국의 포용정책을 어렵게 함으로써 일본의 입장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 논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도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대일정책은 우선 역사인식과 과거사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분야의 협력을 지연시키거나, 역사문제를 빌미로 다른 외교정책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개별 분야에 국한하여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며, 최대한 합리적인 대응책을 찾아 한국과 일본의 여론을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감정에 치우친 압력 행사는 자칫하면 염한론을 불러와 외교정책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교과서 문제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역사학자와 사회과학자들이 학문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지적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한 일본 내의 한국 정책에 동조하는 세력과의 연계를 통하여 일본을 설득하는 작업이 장기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실질적으로 무엇이 국익으로 이어지는가를 파악하여, 정부가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명히 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계획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단호히 하고 점진적으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할 경우,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조하여 정부는 외교득실을 면밀하게 계산하여 행동하고, 시민단체는 일본의 시민단체와의 상호이해를 토대로 일본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이중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문화개방을 실현하여 한국이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현실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동북아 경제나 국제질서를 위해서도 한일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안보협력 면에서도 한국의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 한 일본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일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다채널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일간 문제가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이즈미 정권내의 한일 파이프라인을 시급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들의 교류뿐만 아니라 지적교류를 활성화하여 한국의 입장과 인식을 일본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